

# 윤석열 고발한다는 최강욱... 진중권, “천하의 잡범이” 격분

기사입력 2020-01-23 23:37

“정의로운 척 하면서 특권지위 세습 도와”
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(업무방해)로 23일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에 잇따라 글을 올려 강도 높게 비판했다. 진 전 교수는 최근 연일 문재인 정권과 여권 인사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.



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. 세계일보 자료사진

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비서관이 윤 총장 등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와 함께 “공수처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의 용도가 뭔지 온몸으로 보여준다”고 비꼬았다. 이어 진 전 교수는 “이 천하의 잡범(최 비서관)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 치는 걸 보라”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. 그는 또 “그런데 (문재인) 대통령은 ‘설날 화보 촬영 스케줄’로 바빠서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모양”이라고 비꼬기도 했다.

해당 글을 올리기 직전에도 진 전 교수는 이날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향한 비판과 함께 최 비서관의 혐의 내용을 꼬집는 글을 올렸다. 그는 “추 장관이 들어와 며칠 만에 법무부(法無部)가 됐다”며 “정권 말기에나 일어날 법한 현상인데 벌써 나타난다,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”라고 평가했다. 진 전 교수는 “문재인 정권 사람들, 나쁜 짓 하다가 걸리면 되레 자기들이 화를

낸다"고도 덧붙였다.



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. 연합뉴스

진 전 교수는 "최 비서관 공소장에 따르면,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, 고려대 대학원 입학에 위해 (조 전 장관의 부인인) 정경심 교수가 최 비서관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"며 "오직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니,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메일이나 문자 등 그 대화의 물리적 흔적을 증거로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"고 전했다.

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"조 전 장관 자녀가 입시를 위해 쌓은 스펙은 거의 전부 허위 혹은 날조로 드러났다"며 "그런 애들이 오직 최 비서관이 (변호사 시절) 속한 법무법인의 인턴만은 충실히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느냐"고 되물었다. 그는 "최 비서관은 '법무법인에 아무 자료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검찰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것'이라 믿는 모양"이라며 "하지만 조 전 장관 아들이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, 이미 다 털렸을 것"이라고 부연했다.

진 전 교수는 최 비서관이 정 교수에게 한 발언을 토대로 그의 업무방해죄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하면서 "대학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은, 최 비서관의 행위가 입시에 성실히 임한 다른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았다는 것"이라며 "입으로는 온갖 정의로운 얘기는 다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권력층이 누리는 특권적 지위의 세습을 돕기 위해 힘 없는 이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파렴치한 짓을 해 온 것, 이거야 말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"라고 강조했다.



법무부가 이날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가 '날치기'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진 전 교수는 "또 장난질"이라며 최 비서관을 향해 "추태 그만 부리고 이쯤에서 물러나라"고 요구했다. 진 전 교수는 이날 마지막으로 올린 글에서는 "앞으로 열 받을 일이 많을 텐데 미리부터 감정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, 평정심을 잃지 말고 유쾌하게 비웃으며 즐겁게 화 내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"며 "저들의 통치가 이미 개그의 단계로 접어들었잖나, 즐기라"고 말했다.

앞서 이날 오후 최 비서관의 변호인은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율립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비서관의 입장문을 대독했다. 최 비서관은 입장문에서 "검찰이 인사 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"며 "막연히 자신들의 인사 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"이라고 주장했다. 최 비서관은 또 윤 총장과 검찰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.

김주영 기자 [bueno@segye.com](mailto:bueno@segye.com)

© 세상을 보는 눈, **세계일보**

---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22&aid=0003432992>

---